

POLITICS 사령탑에 김병기...민생경제 회복·개혁과제 속도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단 구성

대변인 문금주 등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5명 포진 부대표에 김문수·권향엽·전진숙·조인철 활약 주목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민생과 경제에 무게를 두고 집권 초반 개혁을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표 인선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 시급해 민생 법안, 민생 추경, 개혁 입법을 균형 있게 짜 맞추도록 하겠다”며 “당·정·대, 을 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민생 현안에 대해 반드시 법안(처리) 전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정권교체 이후 첫 원내 사령탑에 오른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법사·교육 등 상임위별 책임 의원을 안배한 16명의 신임 원내부대표 인선을 발표했다.

비서실장에는 조선의 이기현 의원이, 지원실장에는 윤종근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원내운영수석은 문진석 의원, 정책수석은 허영 의원, 원내소통수석은 박상혁 의원이 각각 맡는다.

신설한 ‘민생부대표’는 김남근 의원이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시 부양’ 필요성을 강조하며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상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16명의 새 원내대표단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원내부대표에 임명된 의원은 김문수·권향엽·전진숙·조인철 의원이며 원내대변인에 임명된 문금주 의원 등 5명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은 장흥 출신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른바 ‘완전한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통합·협치 회복 등을 우선 과제로 강조해왔다.

따라서 우선 이재명 정부 집권 초반 개혁 과제를 뒷받침하는 입법과 시급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원내대표 경선 경전 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문금주 대변인, 김현정 대변인, 허영 정책수석, 문진석 운영수석, 김병기 원내대표, 박상혁 소통수석, 이기현 비서실장, 김남근 민생부대표, 백승아 대변인.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선을 승리한 후 기자들이 ‘상법과 방송3법 등을 언제쯤 처리할 것인가’라고 묻자 “상의해서 처리하겠다”면서도 “상법은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대답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여부와 방식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시행이다. (국회 제출 후) 12일을 넘기지 않고 처리하겠다”며 추경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의 당정협의를 관

련해 “일주일여 한 번 정도 정기적인 당정 협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의 처리는 전 원내대표 체제가 결정할 때 정부적 판단에 따라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재입법 등이다.

김 원내대표가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이런 법안들을 당장 밀어붙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쟁점 법안 처리 시기에 대해 그는 “민생이 시급하기 때문에 민생 법안과 민생 추경이 맞물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과의 협치와 관련해서는 “주요 야당인 국민의힘 대표단이 내일 정해지면 상견례를 하면서 의견들을 나누겠다. 저희 여당 쪽에서는 이 만남의 기회를 정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 요구에 대해서는 “법사위는 우리 상임위 운영 규칙상 2년마다 교체하기로 돼 있는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릴 정도로 이 대통령과 가까운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다.

이 대통령과 수시로 직접 소통이 가능한 당인 국민의힘 대표단이 내일 정해지면 상견례를 하면서 의견들을 나누겠다. 저희 여당 쪽에서는 이 만남의 기회를 정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 예쁜정원 콘테스트 대상에 ‘벌교 우성정원’

개인·생활권 정원 분야 우수정원 10개소 시상

전남도는 2025년 예쁜정원 콘테스트에서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테마정원인 ‘우성정원’ 등 10개의 우수정원을 선정했다.



전남도가 2025년 예쁜정원 콘테스트에서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테마정원인 ‘우성정원’ 등 10개의 우수정원을 선정했다. 사진은 보성군 벌교 추동리 우성정원.

전남도는 도민이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가꾼 정원을 발굴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생활 속 정원문화 확대를 위해 예쁜정원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를 정원 문화산업 세계화 원년으로 삼고 6월까지 두 달간 남도케이(K)-가든 페스티벌도 추진 중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콘테스트는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하는 우수 정책이다. 지난해까지 48개소의 우수정원을

선정했다. 이중 순천 ‘화가의 정원산책’, 해남 ‘문기든’, 비원, 보성 ‘성림정원’ 등 11개소가 민간정원으로 선정돼 정원의 본고장 전남의 명성을 잇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콘테스트는 개인 정원과 생활권 정원 부분으로 진행, 총 15개 시군, 40개소가 응모했다.

심사는 심사위원단 4명이 참여해 디자인과 심미성, 식재와 소재의 다양성, 완성도 등을 종합해 이뤄졌다. 정원전문가 심사위원단은 “지난해보다 더욱 아름답고 특색 있는 정원이 많아 심사

심사 결과 대상을 받은 보성 ‘우성정원(정원주 이경춘)’은 추동저수지가 한눈에 보인다. 부부가 30여 년간 가꿔 온 연못, 벚꽃길, 백합길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테마 정원으로 호평을 받았다.

부문별로 생활권정원 부문은 최우수상 완도 ‘바하 정원(정원주 추서영)’, 우수상 나주 ‘이화림(정원주 허정은)’이 선정됐다.

개인 정원 부문은 최우수상 여수 ‘가사리 꽃나비네(정원주 김숙희)’, 최우수상 장흥 ‘청하대(정원주 김현복)’, 우수상 순천 ‘숙희의 뜰(정원주 안숙희)’, 완도 ‘아내의 정원(정원주 김현희)’이 수상했다.

전남도는 시상식을 통해 선정된 각 정원에 정원주의 자부심을 높이고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전라남도 예쁜정원’ 현판과 상패, 소정의 상금도 전달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문금주 “한국김산업진흥유통공사 설립 추진”

관련 법률 대표발의...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천)은 김산업 진흥을 위한(가칭) 한국김산업진흥유통공사 설립을 위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은 우리나라 농수산물 중 수출 1위 품목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김 수출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달성하는 등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김 생산 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에 머물러 있어, 품질 향상을 통한 더 큰 경쟁력을 제고하기 어렵게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공사 단위의 기관을 설립해 정부가 김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국김산업진흥유통공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개정안은 한국김산업진흥유통공사 설립을 통해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김과 김 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신제품 연구개발, 생산 기술 개발 지원 및 품질관리, 소비촉진 및 수출 확대,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는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SNS를 통해 강조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사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도시에 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개정안은 읍·면 지역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 지역의 사업체에 한해 연매출 30억원 이하라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조건을 예외로 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농가들이 많이 찾는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등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 및 도시 중심으로 설계된 국가발전 정책으로 인해서 농어촌지역은 소외돼 왔다”며 “이제는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김산업 진흥 및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로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 여수서 열리는 해상풍력산업박람회

18~19일 엑스포컨벤션센터 ‘세계 해상풍력...’ 주제

전남도는 대한민국 해상풍력의 중심지로서, 오는 18~19일 여수 엑스포홀에서 해상풍력 산업박람회를 열어 해상풍력산업 육성 비전을 국내외에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상풍력 산업박람회는 ‘세계 해상풍력 허브로의 당당한 도전’을 주제로 지자체 최초로 전남도가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 제시, 연관 기업과의 협약 등을 아낌있게 준비했다.

행사는 대한민국 해상풍력을 이끌어온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발전사, 기자재 사, 전남 시군 등 1000여명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1일차는 기자재 공급망 구축·에너지 기본소득·해상풍력 산업 교육센터 설립·운영 업무 협약, 전남도 동부권 해상풍력 13GW 보급 확대 비전 및 지역 공급망 우대방안, 발전사 프로젝트 현황과 공급망 참여 방안 등을 발표한다.

2일차는 여수·고흥 중심으로 공공주도 단지개발 계획 발표, 양양간 전남 소재 기자재업체 홍보 및 납품 계약 매점 상담을 추진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지역 미래먹거리가 될 해상풍력 산업은 지난 2~3년간 글로벌 경기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올해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이어 3.2GW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패거리를 이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후 화석연료 회귀 움직임이 보였으나 국제사회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 기회로 삼고 있다”며 “지난 4월 신안 집적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산업 메카로 도약하도록 힘써야 하고, 그 중심에 여수, 고흥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번 박람회가 발전사와 지자체가 네트워킹할 최적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연관 산업 육성과 에너지 기반 소득 시대 견인을 하기 위해 지속해서 힘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재태 도의원 “광주·전남 상생기구 개점휴업”

“시·도 실효성 있는 운영 기반 구축해야”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사진)은 최근 전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광주·전남 간 상생·협력의 최일선 기구들이 수년째 중단된 현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정상 기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2014년 출범 이후 매년 1~2차례씩 시도 윤반례로 운영돼 왔지만 2022년 7월을 끝으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올해 역시 회의가 미개최되면서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생발전위원회는 시도 간 주요 현안 조정과 협력사업 발굴 등 광역단위 상생협력 정책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임에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어느 한쪽이 소극적이면 실무회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양 시도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 역시 2019년 2월 이후 중단된 상태”라며 “16개 공공기관과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 등 21개 기관이 참여한 이 협의체



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2020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 위원회로 통합된 이후 사실상 활동이 멈춰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혁신도시 시즌2 논의는 물론 지역 미래전략까지 좌초될 수 있다”며 “혁신도시 발전 전략 수립, 정주 여건 개선, 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협의체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의 기우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전남도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유치 임정표명 과정에서 공동대응이 부재한 점을 언급하며 “양 시도 간 협의기구 차원의 공동 입장 발표였다면 더 큰 시너지와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빛과 물이 하나되는 상생의 생명도시를 만들겠다는 초심을 되새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1기분 자동차세 26만건 260억원 부과

기한 지나면 3% 가산세

광주시는 올해 1기분(1~6월) 자동차세 26만 건에 대해 260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정기간 세목으로,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1기분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일시납부한

납세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 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